

자치경찰 조례 합의 실패... 오늘 다시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의견 청취 두고 자치·국가 경찰 입장차 이인상 "타 시도 의무 규정" 고창경 "독립성 저해"

제주자치경찰 조례안 처리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도의회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대립하는 자치경찰조례를 24일 다시 심의에 올려 합의의 처리를 시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2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운영조례)'을 심사 보류했다.

양 위원장은 "당초 오늘(23일) 처리하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24일 3차 회의에서 운영 조례를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이날 심의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운영 조례 문구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

위) 출범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가 양 기관의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더해 지휘·감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 조례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가 입법 예고했다.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국가경찰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할 때 조례에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경찰청장이 논의 과정에서 '패싱' 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조례안에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자칫 (자치경찰위가) 일방적으로 (사무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들어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는 경찰청으로부터 독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자치경찰조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입장차로 하루 연기에 24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해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처럼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이하 당사자 기관) 의견 청취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맞섰다.

이날 고 단장은 "사무 조정 전에 (조정 내용)을 미리 경찰청에 통보해 청장이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차장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불수용하면 그만 아니냐"며 "그동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가 수차례 의견을 제

시했음에도 자치경찰은 전부 불수용했다. 수정안으로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복지위는 회의를 정회해 양측이 합의할 시간을 주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양 기관 합의 아래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라며 "24일 심사에서 합의 처리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민주당 "특별법 개정안 원점서 재논의"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도의원은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지난 22일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소위에 참여할 의원들을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김경학 의원, 강성민 의원, 홍명환 의원, 조준배 의원, 문경은 의원, 김경미 의원, 정민구 의원 등으로 꾸러졌다.

소위가 구성되자마자 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과제로 거론된 도의원 겸직 특례 허용 방안 등이 도민 여론 수렴과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언론에 공개

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주요 과제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2일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

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겸직 특례와 교육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위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인사청문회 의회 동의 대상 확대 등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도교육청과 제주도의 반대로 반성이 힘든 상황이다.

이상민기자

제2공항 갈등 종식 결의안 계획 놓고 공방

국민의힘 "사실상 제2공항 무효화 결의안"

민주당 "확인 안된 사실 입맛에 맞게 각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오는 2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하려는 계획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결의안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석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정상 추진 결정을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한 민주당 도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제2공항 무효화를 주장하는 결의안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도

원들은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입맛에 맞게 각색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 "공당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논평을 발표한 것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모은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의결 총회를 통해 국민의 힘, 정의당, 희망제주 등 의회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결의안 발의에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미 전체의원의 반 이상이 결의안에 서명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장성철 도당위원장도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인지도 향상에만 활용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앞줄 가운데)와 관계자들이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협약에 서명한 뒤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지자체·균형위 지역균형뉴딜 협약

어제 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지자체 추진·정부 지원 약속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정부, 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

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서 정부·지자체·균형위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국가균형발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지역균형뉴딜 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하도록 공동 노력하며, 정부는 시·도·시·군·구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시·군·구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균형위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균형위의 다각적인 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부미연기자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상임위 통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 결과에 불복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내 유혈사태 중단과 구금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등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탐지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